

최기문 경찰청장 전격 辭意 배경 원활한 조직 운영 위한 자진 勇退로 분석



“임기만료 전 마지막으로 결원 있었던 경무관급 인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여권 핵심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새 경찰청장이 취임하면 여차피 인사를 해야 하므로 최 청장이 인사를 단행할 경우 짧은 기간 내에 2차례의 인사가 실시돼 경찰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내년 4월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경북 영천 보궐선거에 영천 출신인 최 청장이 ‘출마해 달라’는 여권의 권유를 거부한 것도 양측의 불화를 부채질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최 청장은 경북 영천 재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 “절대 아니다”면서 강력히 부인하면서 “정치에 뜻도 없고, 준비도 안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임기말을 맞아 인사권 등을 제약받게 된 최 청장이 신임 경찰청장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인사권 행사를 배려하기 위해서 ‘자진 용퇴’를 단행했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최 청장이 지난달부터 여권에

대검과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외부인사 12명과 검·경 내부인사 2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달 2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1차 회의는 앞으로 이어질 ‘난항’을 예고하는 듯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7시30분이라는 이른 시각에 시작됐지만 위원장 선출에만 1시간이 넘게 걸리면서 분회의는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시작할 수 있었다.

위원장 선출부터 순조롭지 못했던 것은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을 반영하듯 자문위의 구성 자체가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각각 7명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위원장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좀더 적극적인 성유보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검찰에 보다 우호적인 김일수 고대 교수가 공동으로 추천됐다.

위원들은 “위원장은 법학 지식이 많은 학계 출신이 말아야 한다”, “공동위원장 체제가 바람직하다”, “무

檢·警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출범부터 異見

기명 투표로 결정하자” 등 갑론을박을 벌였으며 결국 성 대표의 양보로 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기한을 내년 1월 중순으로 제한하자고 건의했지만 일부 위원은 이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경의 수사권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문위가 출범

196조의 개정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에 공명된 지적이다.

수사권 독립을 59년간의 숙원으로 여기고 있는 경찰은 이번 논의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동등한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의 증거능력 제한 등으로 사법개혁의 소송돌이에

기반의 갈등의 장만 더욱 넓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당초 수사권 조정 협의체 구성 당시에는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5주 내에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3개월이 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예상보다 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두 기관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징계 요구권 ▲수형자 호송업무 검찰기관 ▲출국금지 요청 시 검사지휘 폐지 등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으로는 학계에서 김일수 한국형사법학회장, 정용석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 서보하 사법개혁위 전문위원, 조국 서울법대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법조계에서는 김주덕, 김희수 변호사가 참여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서경석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 언론계에서는 성유보 방송위 상임위원과 신성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여성계에서는 최영희 내일신문 부회장과 황덕남 변호사가 참여한다.

검찰에서는 김희재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이, 경찰에서는 홍영기 경찰청 혁신기획단장이 참여한다.

한 재야 법조인은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편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하며 조직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승적인 차원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형소법상 ‘검찰 수사지휘권’ 등에 여전히 갈등

부터 빠뜨려버린 것은 결국 검찰과 경찰이 근본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기관은 3개월의 논의 끝에 ▲ 긴급체포한 피의자 석방시 검사 사전지휘 폐지 ▲ 경찰의 관할의 수사사소송법 개정 문제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 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경찰 수사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된 196조를 개정해 검·경을 동등한 수사 주체로 재정립할 것을 바라고 있지만 검찰이 양보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두 기관은 ▲ 긴급체포한 피의자 석방시 검사 사전지휘 폐지 ▲ 경찰의 관할의 수사시 검찰 보고의무 폐지 ▲ 압수물 처리시 검사지휘 폐지 등에는 합의했지만 핵심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 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경찰 수사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된 196조를 개정해 검·경을 동등한 수사 주체로 재정립할 것을 바라고 있지만 검찰이 양보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두 기관은 ▲ 긴급체포한 피의자 석방시 검사 사전지휘 폐지 ▲ 경찰의 관할의 수사시 검찰 보고의무 폐지 ▲ 압수물 처리시 검사지휘 폐지 등에는 합의했지만 핵심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 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경찰 수사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된 196조를 개정해 검·경을 동등한 수사 주체로 재정립할 것을 바라고 있지만 검찰이 양보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두 기관은 ▲ 긴급체포한 피의자 석방시 검사 사전지휘 폐지 ▲ 경찰의 관할의 수사시 검찰 보고의무 폐지 ▲ 압수물 처리시 검사지휘 폐지 등에는 합의했지만 핵심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 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경찰 수사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된 196조를 개정해 검·경을 동등한 수사 주체로 재정립할 것을 바라고 있지만 검찰이 양보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이 사람 - 이관희 경찰대학 교수 “언론관계법 개혁방향 세미나”서 政府와 有力 新聞에 쓴 소리



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관련법, 방송관련법, 언론중재관련법의 주요 쟁점을 소개한 뒤 “신문은 일반 상품과 달리 공적 정보제공 등 사회의 공익적 역할을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우편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여론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려는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 시기도 성숙됐다고 본다”면서 “조·중·동 3대 신문은 우리사회의 정론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문사간의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고 조·중·동·아의 지배는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관희 교수는(한국언론학회 회장)는 지난달 12월 15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언론관계법의 개혁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언론학회 제34회 학술대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사회의 모든 현상, 특히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을 가함으로써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안전판”이라면서 “정부 여당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 들일 필요 없이 비판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잘하고 있다는 의연하고도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교수는 열린 우리당과

경찰공제회, 종로구 인의동에 보금자리
新廳舍 준공 기념식 가져

경찰공제회가 최근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번지에서 임상호 이사장, 최기문 경찰청장, 현성일 경무회 사무총장, 김동준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 이사장, 내외캐빈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경찰공제회의 신축사는 지난 98년 12월 신축 부지를 취득한 이래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25개월간 공사를 통해 완공된 초현대식 건물로 지하 5층, 지상 12층으로서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3개층은 경찰공제회 사무실, 지상 5층부터 11층은 7개층은 오피스텔, 지상 12층은 임대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임상호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찰공제회가 발족 15주년을 맞아 그동안 역사를 함께 온 중구 신당동 시대를 마감하고 종로구 인의동에 새로운 동지기를 열고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게 되었다”면서 “이 건물은 총자산 1조원 시대를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공제회의 새로운 각



오와 비전의 상징이자 표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이사장은 공제회의 경영전략 개발과 관련해 『한국 능률협회의 전문가가 그룹에 자금운용 컨설팅을 의뢰했으며, 내년 3월 정기 대의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 결과를 설명하고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제회 운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기문 경찰청장도 축사를 통해 “경찰공제회는 지난 89년 불과 104억원의 자산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총자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어느 공제회보다 안정되고 견실하게 운영되어 우리 경찰관들의 든든한 복지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첨단 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다각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면서 “철저한 경영마인드와 투명한 관리로 더욱 성장하는 경찰공제회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고객 눈높이에 맞춘 室内 정원 조성 서울관악署, 先輩 警友조직에도 남다른 관심

서울 관악서가 지역주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만족치안과 직원만족 조직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화제다. 이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훈 서장은 『고객들의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경찰은 그 눈높이를 따라잡기에 애를 겪고 있는데, 그 공백을 전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경찰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관악서는 이러한 김 서장의 치안시책에 맞춰, 주민 최우선 치안행정 구현을 위해 범죄예방 활동강화로 범죄분위기를 사전 제압하고, 적극적 형사활동으로 범죄피검 체제의 확립과 교통사망사고 특별 방지대책을 강력 시행하는 한편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업무집행을 위해 민원상담 활성화와 주민 공공증 해소에 주력하고 과거 실적위주 단속에서 계도중시 활동으로 치중하여, 주민이 안심하는 치안활동, 주민입장을 생각하는 업무집행으로 주민 눈높이 치안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악서는 매일 개최하는 범죄분석 대책회의도 지역 주민 중심으로 개편해 주민 40여명과 지구대팀장 20여명, 경찰서 형사팀 10여명 등이 참석해 주요 범죄양상, 수법 등 기초치안여건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지구대 활동을 팀별로 평가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그 팀플레이가 실제로 반영되어 범죄 발생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한편 관악경찰서의 청사 환경 개선은 조 다르다. 조 사장은 비좁은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공간을 개선하고 경직된 분위기를

를 완화하고자 내부에 실내 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운치있고 부드러운 분위기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별관 1층의 민원실도 공간을 재배치하고, 컴퓨터 반침대도 재질을 교체해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울러 지하 1층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울터”를 리모델링해 다목적 실내공간을 연출할 예정인 10여명 등이 참석해 주요 범죄양상, 수법 등 기초치안여건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지구대 활동을 팀별로 평가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그 팀플레이가 실제로 반영되어 범죄 발생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한편 관악경찰서의 청사 환경 개선은 조 다르다. 조 사장은 비좁은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공간을 개선하고 경직된 분위기를



고객 눈높이에 맞추어 조성된 조사계 실내 정원.

綠色燈

절도범 가족 도운 온정의 경찰

형사계 경찰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절도범의 가족을 도운 사실이 알려져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구북부경찰서 형사 5반 윤석수(45세·경위) 반장 등 형사와 직원들.

윤 반장은 지난 10월말 전곡을 돌려 북쪽향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옷장을 탄핵의(특수절도)로 김 모(38세)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열쇠 복제기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온 터라 이들을 검거하는 데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혐의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하느라 많은 애를 먹었으나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집은 방문한 윤 반장은 김씨의 아내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3남매와 함께 월세 12만원짜리 단칸방에 살고 있으면서 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장 걱정스러워 보이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게 된 데다 월세가 밀려 자칫 엄동설한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앉게 될지도 모르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던 것. 수감된 김씨가 섬유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IMF로 실직한 이후 점점 생계가 막막해지자 결국 범행에 가담하

게 됐다든 사연도 전해들게 됐다.

윤 반장은 최근 부하 직원들과 함께 심시일반으로 생활품이라도 구입해 전해 주기로 마음먹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형사과장과 형사계장 등 간부들도 그 자리에서 자그마한 성의를 보였다. 비록 쌀과 리면같은 생활품과 현금 등 20여 만원 상당에 불과했지만 틈틈이 도움이 손길을 내밀 생각이었다.

“정말 보잘 것 없어 오히려 낮부끄럽다”며 손사래를 치는 윤 반장은 “관할 구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아이들 아버지가 나올 때까지 성심껏 보살피 주고 싶다”며 겸손해 했다.

교통시스템 개발로 옥조근정훈장 영예

한 일선 경찰관이 획기적인 교통시스템을 개발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계에서 근무하는 김태길 경사(42세).

충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김 경사가 ‘교차로 감응제어식 보행자 작동 신호기’ 등 4건의 교통 시스템을 개발한 공로로 이날 행정처부 주관 ‘2004년 공무원 제안제도 과학기술’ 부문에서 금상(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감응제어식 보행자 작동 신호기’란 보행자가 버튼을 작동할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차량의 신호대기를 막아 교통체증 해소, 에너지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赤色燈

경찰관이 보상금청구 대행 대가 챙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최근 변호사가 아니면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보상금 청구 및 합의 절차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순경 김 모(28세)씨를 불구속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0월 공사현장에서 팔을 다친 K씨에게 “보상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재해보상 신청 및 K씨 소속 회사와의 합의절차를 대신 진행, 올 4~6월 K씨가 보상금 및 합의금으로 3천280만원을 받게 해준 뒤 대가로 84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간부 음주 뺑소니 ... 피해자에 덜미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간부가 뺑소니로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피해자에게 걸려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7일 0시 30분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동아백화점 수성점 앞 네거리에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모(35세)경위가 술에 취한 채 대구 2모 63XX호 겔포퍼 승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경부 31우 88XX호 티뷰론 승용차(운전자 김 모,29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씨와 함께 타고 있던 박 모(23세·여)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경위는 사고 직후 곧바로 차를 버리고 200여m 가량 달아나다 뒤쫓아온 김씨와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경위는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A경위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자동차 과태료 착복 경찰관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윤갑근 부장검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개인 예금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성남 모 경찰서 장 모(49세) 경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교통지도계에 근무하면서 2003년 3월부터 지난 11월까지 무인단속 적발, 안전벨트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건당 4만~10만원씩의 과태료 체납액을 900여 차례에 걸쳐 자기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모두 5천700여만원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다.

장씨는 과태료를 횡령한 후 관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자동차 압류해제촉탁서를 보내고 과태료 납부 고지서 영수증에 위조한 금융기관 수납인을 날인해 상급자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우신문 원고 모집 02-2234-1881